

Strategy report

제 1호 [2025. 7. 21.]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



한반도문제연구소

Korean Peninsula Issues Research Institute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

1. 서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중 경쟁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위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다를 것이다. 중국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미중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레임에 의존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프레임이 바로 ‘패권 경쟁’이다.

‘미중 경쟁’은 흔히 ‘패권 경쟁’ 혹은 ‘패권 전쟁’이라는 강렬한 어조로도 묘사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의가 정확한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양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패권’과 ‘전쟁’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해 중국이 지닌 정책적, 전략적 의도가 그만큼 위협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중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중국을 경쟁자, 혹은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이 경쟁으로 중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우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적당히 말을 잘 듣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힌 적은 없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지닌 패권 자체를 노리고 싸운다고 단정하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양국의 행보를 본다면, 중국의 장기적 전략 목표는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데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꺾기를 억제하는데 있다고 파악된다.

위와 같은 대외정책의 ‘모호성’은 중국의 전략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거시적이고 정서적인 국가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핵심 국가이익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모호하게 설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 일관된 기준 없이 유동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주권’은 단순한 중국 대내외 영토 주권을 넘어 정치제도의 안정, 공산당 지배 체제의 존속, 그리고 내부 소요나 독립운동에 대한 대응까지 포괄한다. 이처럼 국내 정치 문제까지 외부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타국의 인권 비판이나 민주화 요구조차 ‘내정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 개념 역시 모호하게 확장된다. 전통적 군사 안보뿐 아니라, 타국의 방위 정책(한국의 사드 배치 등)도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변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압박 근거로 작용하며, 외교적 개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가발전이익’은 더욱 추상적이며, 경제·사회 전반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 안보, 데이터 주권, 해외 경제활동 등 새로운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침해를 국가안보나 주권 침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을 마련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외교·경제 영역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중국은 이러한 세 가지 핵심 국가이익이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호성과 유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상황에 따라 재정의하고, 필요시 외교적 수사와 무력시위, 경제 보복까지 병행할 수 있는 다층적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 표면적으로는 ‘화평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 거의 모든 이슈를 ‘핵심 이익’으로 편입시켜 대응 수위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우회하고, 자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당화된 모호성’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주변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진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전략적 판단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렇기에, 중국의 주요 대외 행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중국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에게는 중국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시각, 입장,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지 외교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직결된 문제다.

현재 미국은 대중국 압박의 핵심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지역 봉쇄 전략인 ‘A2/AD(접근거부·지역거부)’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두 전략의 충돌 지점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지역이 바로 대만과 한반도다. 양국의 패권 전략이 교차하는 공간에 위치한 한국은, 현재도 미중 양국으로부터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느 한 편을 명확히 택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되던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으며, 외교·경제·안보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관세 협상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국제 질서에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가치 중심 질서에서 이탈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치’ 보다는 ‘이익’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정책 수단을 재조정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전까지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무력 시위와 같은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관철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에게 한반도는 군사 동맹, 경제적 파트너인 대한민국과 함께 북중러 견제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방식과 전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들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과 충돌한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그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국에게 한반도란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력을 투사할 수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 깊이 개입해왔다. 고조선 시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한반도에 일관된 군사적 관여를 통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방어해왔다. 이는 곧 중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핵심 전략지대이자 지정학적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된 자료와 같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는 단연 화북평야였다. 한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지닌 이 지역은, 황허강이 관통하며 비옥한 토지를 형성한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중국의 경제와 생존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어왔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과 인구 집중은 곧 정치·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중국 안보 전략의 핵심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 반복된 이민족의 침입을 겪으면서, 화북평야를 방어할 완충지대의 필요성을 체득했다. 서부에는 티베트와 신장이, 남부에는 정글 지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동부에서는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심장부로 직결되는 침투 경로였다. 때문에 중국의 통일 왕조들은 국토를 통합한 후, 서부와 남부를 차례로 점령하고, 한반도와의 관계 역시 항상 새롭게 정립해왔으며, 그것이 전쟁이든, 조공-책봉 관계이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데에 주력했다.

현대의 중화인민공화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건국을 선포했고, 이듬해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참전은, 단지 사회주의 형제국인 북한을 지원한다는 이념적 이유만이 아니라, 자국의 완충지대를 지키기 위한 지정학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확보, 미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상황을 피하는데 성공했다. 냉전의 시작점이었던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 그림 출처 : 중앙일보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며 경제 성장을 도모했고,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과의 패권 구도에서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중국의 A2/AD 전략과 제1-3도련선 구상 속에서, 한반도는 단지 최전선이 아니라 반드시 ‘중국이 통제하거나 최소한 중립화해야 할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는 ‘내 것이 아니더라도, 적에게 넘겨져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것이 중국의 인식이며, 이는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 원칙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현상 유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현상 유지의 일부로 간주하며, 그것이 북한을 억제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안정장치로 작동한다고 본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요구가 가져올 외교적 마찰과 한국 내 반발을 계산한 전략적 침묵의 결과다.

사실,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이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면서도, 일종의 ‘금치산자’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통제를 벗어나 중국을 향해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핵 실험 및 주변국에 대한 군사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고조시키며, 이는 곧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일의 군사력 강화 및 핵무장 논의를 촉진시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만의 핵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서 대만이 핵을 갖는 순간, 중국의 통일 전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제1도련선 구상도 좌초하게 된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무너질 경우, 중국은 북부 한반도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핵을 용인하자니 주변국 핵무장을 촉진시키고, 북핵을 제거하자니 북한 정권 자체가 위태롭다. 중국은 이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북핵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정권이 무너지거나,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진하여 북한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국은 자국 국경선에서 곧바로 미국과 마주하게 되는 전략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의 대부분을 점거, 사실상 통제하고, 북한 내부에 자국 미디어와 콘텐츠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친중 성향을 강화하려는 기반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병아리 계획’과 같은 비상 개입 시나리오를 통해, 유사시에 군사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북한 지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리 차원을 넘어,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포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정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대한국 전략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안정적인 영향력 투사를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해양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2/AD 전략, 제1-3 도련선 전략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베이징 중심의 위계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이 세계관에서는 중국식 권위주의와 집단주의가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이 설정한 제1 도련선 내 유일한 미국의 동맹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에,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위협, 회유, 연대, 문화적 흡수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중립화하거나 친중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네 가지 전략을 병행한다. 첫째는 위협과 회유이다.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안정시키는 ‘조절자’ 역할을 자임한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등장한 한한령과 같은 경제 제재는 한편으로는 경제 협력을 통한 회유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둘째는 연대 전략이다. 중국과 한반도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탈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역사적 연대를 강조하며, 과거 만주국 문제, 일제강점기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적 입장을 취하는 스탠스를 보인다.

셋째는 문화적 흡수 전략이다. 동북공정, 한복·김치 논란과 같은 문화 공정은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국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중국 중심 질서에 동화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다.

넷째는 친중 세력의 육성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유력 정당 인사나 지식인과의 접촉, 회유를 통해 휴민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내 친중 세력을 육성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인지전’ 과 같은 정보전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한반도를 자국의 해양 패권 실현과 전략적 안정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로 삼고, 대한민국을 중립화하거나 친중화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장기적 영향력 투사 전략이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자국의 해양 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통제해야 하면서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내 유일한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식 권위주의 질서와 상충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립화 또는 친중화가 필수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회유와 회유, 역사적 연대 강조, 문화적 흡수, 친중 세력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군사적 위협과 북한을 활용한 안보 불안 조성은 회유와 병행되어 ‘조절자’ 역할을 자임하게 하고, 일제강점기라는 공동의 역사 경험을 매개로 연대감을 강조한다. 또한 동북공정과 문화 공정을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를 흡수하려 하며, 국내 지식인 및 정치권 인사에 대한 접촉을 통해 친중 여론을 형성하고 인지전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친중 성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대한반도 전략이 수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략적 결단이다. 그동안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양측과의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국제질서가 양극화되고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는 지금, 모호한 입장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고 전략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자국의 안보, 가치, 생존을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고 능동적인 전략적 입장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국가 전반의 지정학·지경학 감각을 높이는 것이다. 산업계, 정치권,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경향은 매우 위험하며, 공급망·무역·기술·투자 등의 모든 영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정책 판단과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지정학 교육과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 유럽 및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가치 연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 압박을 완화하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다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외교 다변화를 넘어 자율적 외교의 기반을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내부의 회복력과 통합 역량 강화다. 외부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분열이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악용하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신뢰 회복, 그리고 국가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강한 통합력을 갖출 때, 외부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주체적으로 생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전략적 인식, 외교·경제·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부 통합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가적 조건이다. 주변 강대국의 확장적 프로파간다에 휘말리지 않는, 우리의 상황을 직시한 국가적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